

#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논의 동향

2013. 5





#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논의 동향

2013. 5

---

박형중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박영호 (국제관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김동수 (통일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 차

I. 머리말 .....	1
II.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 .....	3
1. 대북정책 기조 .....	3
2. 대북정책 4원칙 .....	4
III. 의회 외교위원회 청문회 증언 .....	6
1. 협상론 .....	7
2. 압박 강화론 .....	7
IV. 민간 전문가의 대북정책 제안 .....	10
1. 특사파견론 .....	10
2. 6자회담 복원론 .....	11

V. 평가 .....	12
1. 개요 .....	12
2. 6대 구성요소 .....	12
가. 다자 제재 강화 .....	13
나. 북한 거래기업에 대한 “2차적” 징벌 .....	14
다. 대북 압박 증가 .....	14
라. 관여 정책의 재개 .....	15
마. 중국에 대한 압력 행사 .....	16
바. 전략적 인내의 지속 .....	16
3. 요약 및 평가 .....	17
VI.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함의 .....	18
1. 한·미 공조 통한 대화 유도 .....	18
2. 미국 정책의 변화에 유의 .....	18
3. 한국의 대북정책 주도권 제고 .....	19
4. 6자회담 재개 및 기타 가능성에 대비 .....	20
5. 비핵화와 비확산의 갈등 방지 .....	20
6.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적극 추진 .....	21

## I. 머리말

-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2013.2.12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인하여 최악의 상태로 진입
  - 1기 오바마 정부 출범시 대화와 협상을 강조했고, 2012년에는 2·29 합의에 도달했으나 북한이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
  - 2012.4 및 동년 12 미사일 실험, 2013.2 3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이후 협박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높인 것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강화
  
- 이러한 상황은 보다 효과적인 새로운 정책을 모색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자각을 강화
  - 하원 외교위원회(2013.3.5)와 상원 외교위원회(2013.3.7)는 각각 청문회를 열고 대북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 한반도 관련 주요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은 개인적인 기고, 기관 연구 보고서, 전문가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정세평가와 정책 대안을 적극 개진
  
- 3차 핵실험 이후 미국 조야에 나타나는 대북정책의 기류는
  - 북한의 약속 파기, 핵 보유 고수, 미국에 대한 핵 위협 등으로 북한에 대한 부정적 평가 증가
  - 정보 유입 강화, 금융제재 등 다양한 제재를 강화하고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와 함께
  - 북한이 먼저 변하고 진실되고 신뢰있는 협상의 자세를 보여야 미·북 대화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주류



- 이처럼 강경론이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 전면적 정책 재검토나 의미 있는 수정은 미발견
  -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는 것보다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상황 악화를 방지하면서,
  - 제재 강화, 중국과 소통 강화 등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다양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 장기적으로 체제 전환을 통해 북한의 위협과 도전을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 본 보고서는 미국 조야에 등장한 다양한 대북정책 입장을 소개함으로써,
  - 미국 대북정책의 현재 입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 제공

## II.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

- 3차 핵실험 이후 미국 정부는 두 핵심 책임자의 발언을 통해 대북정책을 천명
  -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도닐런(Tom Donilon)의 뉴욕 아시아협회 연설(2013.3.11): “2013년의 미국과 아시아-태평양”<sup>1)</sup>
  - 국무부 북한정책특별대표 데이비스(Glyn Davies)의 상원외교위원회 청문회 증언(2013.3.7): “미국의 대북정책”<sup>2)</sup>
  
- 이하에서 서술되는 미국 대북정책 내용은 위의 두 문건을 요약

### 1. 대북정책 기초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국은 북한의 침략 억제와 동맹 보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준수를 관철시키는 정책을 추진
  
-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불인정하고 미사일 개발을 불용
  
- 북한의 국제의무 위반은 유엔 제재 등 심각한 결과 초래

---

1) Remarks By Tom Donilon, National Security Advisory to the President: “The United States and the Asia-Pacific in 2013,” The Asia Society (New York, New York Monday, March 11, 2013).

2) Testimony of Glyn T. Davies,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 U.S. Department of State, Before the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March 7, 2013),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http://www.state.gov/p/eap/rls/rm/2013/03/205691.htm>>.

- 북한이 먼저 변해야 미국과 진실된 협상이 가능
- 북한은 9·19 공동성명을 준수할 의무
  - 북한은 평화적 방법으로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수용하며, 이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약속 준수와 의무이행에 대한 준비를 갖추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
- 북한의 지도자들은 미얀마 경험 수용 필요
  - 미얀마는 북한과 달리 고립을 깨고 나와 주변국들 및 미국과 파트너십을 이루어 국민들의 밝은 미래를 향한 문을 개방
- 미국은 전 세계에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북한주민에게 외부정보 공급 증가를 위해 노력
- 미국의 대북정책은 초당적인 지지 확보
  - 민주당과 공화당은 오바마 정부의 관여와 압박을 혼합한 대북정책을 공히 전폭적으로 지지

## 2. 대북정책 4원칙

- 한·미·일의 긴밀하고 확장된 협력은 한반도의 안정화와 비핵화를 위해서 필수
  -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미·중 간 긴밀한 정책조정 필요
  - 중국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를 환영

- 미국은 북한의 나쁜 행동에 보상하는 것을 거부
  - 미국은 헛된 약속을 받아들이거나 위협에 굴복하는 거래를 하지 않을 것
  - 미국은 북한과 진정한 협상을 하는 데 개방되어 있으며, 북한은 필요한 지원과 존중을 받으려면 행동 변화 필요
  -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미국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저지시키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독자적 및 국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
  
- 미국은 본토와 동맹국 방어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
  - 미국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대응하고 보호할 것
  - 미국의 대응은 북한의 WMD 사용뿐만 아니라 핵무기나 핵물질을 다른 국가나 비국가단체에 넘기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
  
- 미국은 북한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독려
  - 미국은 북한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주민을 삶을 개선하는 것을 도울 것이며, 북한은 현재와는 다른 길 선택 필요
  - 미국은 북한과 협상하고 협상에서 합의한 약속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북한은 약속준수와 국제법 존중을 증명할 수 있는 의미있는 조치와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

### Ⅲ. 의회 외교위원회 청문회 증언

- 미 하원(2013.3.5)과 상원(2013.3.7)은 각각 북한문제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
  - 그간 미국의 대북정책은 협상을 통해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것이었는데,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이러한 미국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방증
  - 따라서 청문회의 목적은 이러한 실패한 접근과는 다른 보다 현실적이고 좋은 대안을 찾는 것
  
-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 증언자
  - 조셉 디트라니(Joseph R. DeTrani, President, 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Alliance)
  - 성윤 리(Sung-Yoon Lee, Tufts University, The Fletcher School of Law and Diplomacy 조교수)
  - 데이비드 애셔(David L. Asher, Non-resident Senior Fellow,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 증언자
  - 조셉 디트라니(Joseph R. DeTrani)
  - 로버트 조셉(Robert G. Joseph, Former Under Secretary of State for Arms Control and International Security)
  - 스티븐 보스워스(Steven Bosworth, Tufts University, The Fletcher School of Law and Diplomacy 학장)

- 상하외교위원회 청문회의 증언자는 총 5명 (디트라니는 상하 양원에서 증언)이며 증언자에 따라서 다른 정책노선을 제안
  - 디트라니와 보스워스는 북한과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
  - 리, 애셔와 조셉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시켜야 하는 필요와 그 구체적 방법 제시

## 1. 협상론

- 디트라니는 중국 주도로 4자회담 개최가 필요하다고 주장
  - 2003년의 경우와 유사하게 중국은 북한과 미국이 참여하고 한국도 포함하는 긴급 회의 소집 필요
  - 이 회의의 목적은 2005년 9·19 성명에 준하여 북한이 경제원조와 안전보장을 대가로 궁극적으로 비핵화 하는데 진실로 관심이 있는지 또한 6자회담을 재소집하는 것이 아직도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
- 보스워스는 포괄적 관여의 재개를 주장
  - 미국이 북한에 궁극적으로 다시 관여해야 할 것이며, 그 관여방식은 6자회담 9·19 성명에 제시된 바와 같은 포괄적 관여

## 2. 압박 강화론

- 리, 애셔, 그리고 조셉은 대북 압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 과거 미국 대북정책 실패를 반성할 필요
  - 핵무장한 북한정권은 더 큰 위협을 제기
  - 북한의 위협을 포괄적으로 다루며 정권에 효과적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접근이 필요
- 대북정책의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 기존 미국의 대북정책의 실패 즉, 6자회담 틀을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시키고자 했던 미국의 외교 정책 그리고 유엔 제재를 통한 압박 전략이 실패
    - 미국은 모든 외교 수단을 통합한 포괄적 전략을 발전시켜야 할 필요
    - 확산 네트워크 폐쇄,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비밀스런 파괴, 지도부 돈줄 봉쇄, 인권 참상 폭로 확대 등을 추구
    - 만약 노선을 변경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정권 변화 고려
- 모든 외교 수단을 동원한 포괄적 접근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
    - 국가안보위원회에 대북정책행동그룹(North Korean Activities Group)을 재설치하여 북한의 불법 활동, 무기 거래, 정권 재정 등에 대해 미국의 모든 수단의 동원하여 추적하며, 관련 기관 합동과 국제적 노력을 추구
    - 미국 법무부가 북한의 불법 행동에 대해 조사하여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 북한 내부 변화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김정은 정권 내부에 영향을 주고 평화적 붕괴를 촉진
    - 국가정보평가위(NIE)의 조사를 통해 중국이 북한의 위협한 활동을 방조 또는 제약했는가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중국에 대한 제재를 준비

- 이란에 대한 제재 수준에 상응하는 대북 제재를 추진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
- 애국법 31조를 적용하여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은 미국의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금지
-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



## IV. 민간 전문가의 대북정책 제안

- 민간 전문가의 정책 제안은 이상에서 언급한 공식 입장 및 청문회 발표  
입장과 대체로 유사
- 따라서 여기서는 언급할 필요가 있는 두 가지 정책제안만을 주목
  - 에반스 리비어(Evans J.R. Revere, Non-resident Senior Fellow,  
Brookings Institution)의 정책제안서 “오바마 집권 2기의 한·  
미관계: 도전과 변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sup>3)</sup>
  - 스탠포드 대학교 부설 쇼렌스틴 아태 연구소(Shorenstein Asia  
-Pacific Research Center)의 보고서 “북한 문제와 한국이 지도  
력을 발휘해야 할 필요성”<sup>4)</sup>

### 1. 특사파견론

- 리비어의 대북 특사 파견 제안
  - 오바마 대통령을 대변할 수 있는 특사를 평양에 파견하고 북한의  
최고 실세와 접촉하여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의를 가지고 있  
는지를 파악할 필요
  - 특사는 핵 도발에 대한 단호히 대처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미·북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포괄적 협상 카드를 북한에 제시

---

3) Evans J.R. Revere,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Relations in President Obama's Second Term: Managing Challenge and Change* (The Brookings Institution, February 2013).

4) Shorenstein Asia-Pacific Research Center *The North Korea Problem and the Necessity for South Korean Leadership*, Policy Report (March 4, 2003).

- 북한이 만약 이 접근법을 거부한다면, 미국의 강경책 정당화 가능
- 쇼렌스틴 보고서의 박근혜 정부 역할론과 특사 파견론
  - 단기간으로 미·북 직접 협상은 불가능하지만,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한 상황을 통제하고 북한 지도부 태도 변화를 유도할 필요
  - 한국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한 바,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북한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책임자는 한국의 박근혜 정부
  - 신뢰프로세스의 일환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고위 관리와 접촉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대북특사 임명 고려
  -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

## 2. 6자회담 복원론

- 쇼렌스틴 보고서의 6자회담 복원론
  - 한국 정부의 목표는 6자회담의 복원
  -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한국, 북한, 미국, 중국으로 구성된 소위원회 구성하여 한반도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광범위하고도 밀도 있게 다룰 필요
  - 이 시도의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적어도 특히 중국에게 북한의 도발로 인하여 동북아의 안보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은 확인하는 기능
  - 4국 소위원회의 목표는 포괄적 합의 도출을 통해 오바마 정부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함 의하는 것

## V. 평가

### 1. 개요

- 북한의 2·29 합의 파기, 2012.12 미사일 실험, 2013.2 3차 핵실험으로 미국 조야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매우 부정적
  - 북한이 먼저 변화를 보여야 미국과 진실되고 확실한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주류
- 미국 조야의 논의는 조만간 북한과의 건설적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간주
  - 현재의 북한을 직접 상대하기보다는 북한이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외교적·군사적 행보를 하면서 상황을 관망
- 미국의 대북정책은 변화도 보이고 있는 바, 단중기적으로
  -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강제할 강화된 압박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한편,
  - 중국과의 외교를 강화하여 중국을 설득 또는 상호간에 전략적 불신을 축소함으로써,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 부여

### 2. 6대 구성 요소

- 이상에서 제시한 미 정부의 공식 입장, 전문가들의 여러 정책 제안을

종합적으로 관찰하면, 미국 대북정책 논의는 6대 요소로 구성<sup>5)</sup>

- 각 요소는 각각 강약점을 가지고 있는 바, 이를 종합하면, 현재 미국 대북정책 운신의 폭을 파악 가능

## 가. 다자 제재 강화

### ○ 목표

- 유엔 안보리 결의에 기반하여 유엔회원국들이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의 생산과 판매 및 자금확보와 관련한 정권, 기관 및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조치에 참가 유도

### ○ 장단점

- 대북 제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제약하는 것에는 상당한 효과, 그러나 유엔 제재가 이미 다양하게 시행 중이기 때문에 추가 제재 조치의 효용성은 미약
- 북한 무역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데, 최근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
- 단순히 유엔 제재가 강화하는 것은 불충분하기 때문에 미국은 독자적 제재 및 압박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 중

---

5) 6대 항목 설정은 Max Fisher, "Obama's Six Options for Dealing with North Korea," *The Washington Post* (February 12, 2013)을 참조했고, 그 내용은 전면 재설정된 것임.

#### 나. 북한 거래기업에 대한 “2차적” 징벌<sup>6)</sup>

##### ○ 목표

- 2005년 마카오의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을 대상으로 취했던 조치와 같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 특히 금융기관에 대해 제재하는 것으로 북한과 외국기업과의 거래를 근본적으로 차단

##### ○ 장단점

- 북한정권 유지와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이 불법 거래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매우 효과가 높은 정책 수단이며, 특히 미국 의회가 이를 강력히 요구
- 미국 대통령의 권한을 통해 자금세탁 “특별 우려” 대상을 지정하면 제재대상 은행과 기업의 숫자가 극적으로 증가하는데, 이 경우 이러한 기업, 특히 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과 관련한 불확실성 증가
- 많은 중국기업이 제재대상으로 등장하여, 미·중 간에 외교문제가 될 수 있고 미국 기업에도 피해가 있을 가능성

#### 다. 대북 압박 증가

##### ○ 목표

- 대북 정보 유입을 현격히 증가, 인권 참상 폭로 증가, 확산방지

---

6) A가 B와는 분쟁관계에 있지만, C와는 분쟁관계가 없는 상황을 상정하고 이 상황에서 C가 B와 거래하는 경우, A가 C에 대해 징벌을 가하는 것을 2차적 징벌이라고 함.

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비밀공작과 같은 공세적 수단을 보다 강력하게 사용하여 북한을 압박

○ 장단점

- 유엔, 세계 각국, 국제기구와 비정부 기구는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 강화 및 인권 침해 폭로 사업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있고 자발적 조치를 실시
- 이러한 조치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지나친 공작은 중국의 방해 또는 북한의 반발 유발

라. 관여 정책의 재개

○ 목표

- 모든 현안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과의 포괄적 협상을 진행하고, 북한의 안전보장, 제재해제, 경제 및 에너지 지원을 통해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 유도

○ 장단점

- 최근 증가한 북한의 도발과 협박, 핵무기 보유 고수 및 핵무기 사용 협박 등으로 관여 정책 재개 난망
- 북한은 외부의 안전보장 제공, 경제 및 에너지 지원을 대가로 비핵화 궤도에 복귀하는 데 관심 결여
- 과거 북한에 대한 관여 정책이 거듭하여 실패한 것 때문에, 미국 국내정치적 거부감이 크며, 소수 의견으로 존재

## 마. 중국에 대한 압력 행사

### ○ 목표

- 미국과 중국 간에 북한 문제에 대한 전략적 불신을 감소시키며, 이를 통해 중국이 보다 실질적 압력을 행사하여 북한의 행동을 순치하고 비핵화 프로세스에 복귀하도록 견인

### ○ 장단점

-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인해 미국이 취한 군사적 대응 조치(서해에 항공모함 진입, 미국 전략폭격기 시험비행, 미사일 방어체제 강화)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비판적 문제 의식을 크게 증가시키는 데 기여
- 중국과 전략적 불신을 완화하기 위한 설득과 당근을 제공(예를 들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감소하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완화)한 것도 중국의 대북압력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
- 북한문제로 인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인 미·중 관계에서 마찰 증가 예상

## 바. 전략적 인내의 지속

### ○ 목표

- 여건 변화로 북한정권이 비핵화 프로세스에 진지하게 복귀하게 되거나, 미국이 보다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기다림

- 장단점
  - 북한의 협박과 도발에 굴하지 않으며,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등 미국의 대북정책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입장 변화를 요구
  - 오래 기다릴수록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진전하게 되고, 북한의 핵 보유와 도발로 인해 한반도에 긴장 유지 예상

### 3. 요약 및 평가

- 3차 핵실험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은 ‘전략적 인내’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보다 적극적 자세
  - 미국은 북한에 대한 강경입장을 고수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제재 강화와 중국 설득에 중점을 두고 현상을 관리하며, 장기적으로는 북한 체제 전환을 통해 북한의 위협과 도전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 이러한 맥락에서 6대 요소를 각각 강화하여 처방
  -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근거한 대북 제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
  -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정보 유입 강화와 인권 침해 폭로 강화를 시도
  - 독자적 금융 제재 등 미국 단독의 제재 강화 모색
  - 중국과 전략적 불신을 해소하는 한편, 중국이 보다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설득과 압박



## VI.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합의

### 1. 한·미 공조 통한 대화 유도

-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에서 우리 정부와 미국은 정책적으로 일치된 접근을 노정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북한의 선한 행동에는 상응하게 대응
  
- 이는 제임스 케리(James Kerry) 미 국무장관 방한 시 4.12 발표된 한·미 외교장관 회담 공동성명에서도 확인
  -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 재확인
  - 북한 비핵화 중요성 재확인
  - 미국이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진심으로 환영
  - 북한이 국제의무와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6자회담 9·19 성명 이행 촉구
  
- 한·미는 이와 같은 일치된 입장을 토대로,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

### 2. 미국 정책의 변화에 유의

- 당분간 ‘전략적 인내’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 단·중기적 차원에서 단호한 대북입장 견지 및 군사충돌 방지

- 북핵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북한을 ‘관리’
  -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주장 수용 불용 및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 접근
  - 한·미 정책조율을 통해 한국이 대북정책 이니셔티브를 취할 것을 기대
- 새로운 정책 요소는 시간이 지나면서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
    - 특히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지 않고 도발과 긴장 조성을 지속한다면, 강압 정책 측면이 현저히 강화되고 구체화되어 갈 것으로 예상

### 3. 한국의 대북정책 주도권 제고

- 미국은 기본적으로 대북정책은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
  - 다만 대북협상에 극도의 피로감을 가지고 있는 미국 정부의 일시적 입장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존재
- 한국의 대북정책 주도는 그간 미국이 미·북 대화에 앞서 남북관계 개선을 선행으로 요구한 정책과 일치할 뿐 아니라,
  - 동맹 중시정책에 따라 한국의 정책 이니셔티브를 존중하고 한·미공조를 통해 정책 조율을 해나가려는 자세로 평가
- 이러한 제안은 미국이 한국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미국의 권유와 상관없이 한국은 선제적으로 남북관계를 주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

#### 4. 6자회담 재개 및 기타 가능성에 대비

- 한·미의 공식 기본입장은 6자회담 재개
  -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계속 독려할 것이며, 만약 북한이 이러한 선택을 한다면,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따른 공약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
- 그러나 일부 민간 정책 제안가들은 6자회담과 별개로 한·미·북·중의 4자회담 또는 6자회담의 일부로서 4자회담을 강화시키는 제안을 내놓고 있음에 유의 (디트라니와 쇼렌스틴 아태 연구소 보고서)
  - 필요에 따라 미국이 고위급 특사를 파견하여 미국과 직접 접촉할 가능성도 존재 (리비아의 정책 제안)

#### 5. 비핵화와 비확산의 갈등 방지

- 한·미 간에 북한 핵문제 처리에 이견이 있다는 여론에 대한 대응 필요
  - 한국 내 일부 견해로서 “한국은 비핵화를 추진하고, 미국은 비확산을 추진한다는 의미에서 한·미 간에 북한 핵문제에 정책적 이견이 있다”는 주장이 존재
  - 이러한 견해가 존재하는 것은 대북정책을 놓고 한·미 간 불신을 만들 수 있으므로 한·미 정책 당국이 합의된 명확한 견해를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
- 이와 관련, 4.12 발표된 한·미 외교장관 회담 공동성명은 ‘북한 비핵화의 중요성을 재확인’

## 6.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적극 추진

- 한국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아직 미국 측의 이해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시급히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할 필요
- 미국은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는 경우 그동안 보류해왔던 포괄적 접근을 다시 고려할 가능성 존재
  - 비핵화, 관계 정상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문제, 에너지·경제지원문제 등을 포괄적인 협상의제로 하는 다자 틀 속의 양자 대화를 추진할 여지
- 우리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원칙에 맞추어
  - 북한이 긴장국면을 계속 활용하려 할 경우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 남북관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다자협력의 제 요소가 상호 추동하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가동되도록 하는 세부 로드맵을 작성·추진



## 통일연구원 회원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 연구총서, 정세분석보고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신청서					
성 명		입금자 (입금일자)			
근 무 처		직 위			
간 행 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				
연 락 처	전 화		내선 전화		
	핸 드 폰		FAX		
	전자메일				
전 공 및 관심분야					
회원구분	학생회원 (   )		일반회원 (   )		기관회원 (   )
<p style="text-align: center;">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 본 신청서를 보내주시시오.  
 (우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E-Mail: pcm@kinu.or.kr

※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

##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논의 동향

통일정세분석 2013-04

---

발행처	통 일 연 구 원
편집인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서울특별시 한천로 1307(수유동) 전화 : 02-901-2525 팩스 : 02-901-2544
인쇄처	(주)세원문화사 전화 : 02-2265-1141
인쇄일	2013년 5월
발행일	2013년 5월

---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전화 : 900-4300(代)